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성진아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1.8.11.~2022.6.10.
훈련기관	미시간주립대학교	보고서 매수	100 매
훈련과제	경제·재정		
보고서 제목	미국의 對中정책기조 변화가 우리나라 대외경제전략에 미치는 영향		
내용요약	<p>한국은 중국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 왔고 미국과는 중요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면적인 현실은 미-중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무역과 기술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p> <p>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간 통상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국가와 경제적·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p> <p>미국은 중국과 지속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 또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내수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기조가 변화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해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갑자기 방향을 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임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p>		

대외경제 환경에 변수가 더욱 많아져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미국 또는 중국 양자택일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중간 쟁점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등에 관한 국내연구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對中정책기조 변화가 우리나라 대외경제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구과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중간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현재와 향후 미중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양국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념전쟁에서부터 경제적 갈등, 외교적 충돌 등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미국은 세계유일의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관세 및 무역 전쟁을 일으키며 미국우선주의 및 일방주의를 추진했던 반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그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자세로 중국을 적보다는 경쟁자로 간

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 바이든 정부가 국내정치적 분열 극복, 코로나19 퇴치, 경제 회복 등 산재해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에 치중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갑자기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세계 각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내수중심의 첨단기술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성장해온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정책방향이 국익에 이롭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만의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등 신성장 유망산업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제협약이나 무역협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규범에 맞춰 국내 산업기준 등을 조정하고 다자주의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넓혀가야 한다.